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7988(본소) 이혼
2017드단1819(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A (1962년생, 남)
주소
등록기준지
피고(반소원고) B (1965년생, 여)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7. 3. 21.
판 결 선 고 2017. 4. 18.

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양육비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와 반소 부양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로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5,000만 원, 과거부양료로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0. 10. 30.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 최 00과 최**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의 이혼청구 및 반소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갑 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여 왔고 각자 본소와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를 유기하여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 이룩한 재산으로서 1992. 7.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아파트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18. 정**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위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그 대금 1억 원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1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자녀들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80%, 피고 20%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000만 원(= 1억 원 × 20%)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태어난 최00과 최**이 성년이 될 때까지 15년간 혼자서 양

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보았거나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996년경부터 원고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원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온 점, 원고와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생활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 원고는 처음 본소를 제기할 때 이혼만 청구하였을 뿐 과거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자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과거양육비청구를 포함시킨 점, 원고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피고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반소 부양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부양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보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였고 피고로부터 양육비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며, 성년이 된 자녀들의 대학 학비까지 부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가 피고에게 과거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양육비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 반소 부양료청구는 각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박무영